

전국 기관장회의 자료

2026. 1.



고용노동부

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 개요 | 1 |
| II 고용노동부 정책 의제 | 5 |
| III 지방청 업무보고 | 13 |
|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| 15 |
| 2. 경기지방고용노동청 | 21 |
| 3. 중부지방고용노동청 | 29 |
| 4. 부산지방고용노동청 | 37 |
| 5. 대구지방고용노동청 | 43 |
| 6. 광주지방고용노동청 | 49 |
| 7. 대전지방고용노동청 | 57 |

1. 개요

I. 개요

1 행사 개요

* 드레스코드: 감독관 춘추복+타이

- (일시·장소) 1.23(금) 15:00~,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
- (참석) **본부** 장관(주재), 차관·본부장, **소 실·국장**, 정책보좌관, 실 주무과장, 근로감독·안전감독과장, 기획·혁신·운영지원과장, 홍보담당관
 - **지방관서** 7개 지방청장(서울·경기·충북·부산·대구·광주·대전) 및 41개 지청장
- (내용) **소** 지방관서에 노동정책 비전·미션을 공유하고,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3대 격차(임금체불, 산재예방, 청년일자리) 해소 방안 논의
 - (본부) 고용노동부 정책 의제 공유 및 논의
 - (지방관서) ①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▲산업재해 예방, ▲임금체불 근절, ▲청년 일자리 지원 목표 및 추진계획, ②26년 역점 추진사항 등(청별 발표)

2 행사 순서

| 시 간 | 내 용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15:00~15:02 ("2) | ▶ 개회 및 국민의례 | ▶ (사회) 기획재정담당관 |
| 15:02~15:07 ("5) | ▶ 모두말씀(장관) | |
| 15:07~15:12 ("5) | ▶ 고용노동부 정책 의제 공유 | ▶ (발제) 기획조정실장 |
| 15:12~15:47 ("35) | ▶ 청별 3대 목표 및 추진계획 보고 | ▶ (보고) 지방고용노동청장 |
| 15:47~16:57 ("70) | ▶ 자유 토론 + 댓글 소통 | |
| 16:57~17:00 ("3) | ▶ 마무리말씀(장관) | |

II. 고용노동부 정책 의제

II. 고용노동부 정책 의제

1. 추진 배경

-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정부 노동정책 철학을 정책 의제로 구조화하고 향후 정책 홍보+메시지에 일관되게 활용
- ⇒ 정책 의제를 통해 '고용노동부가 하는 일'을 국민께 뚜렷하고 분명하게 전달하여 정책 체감도 및 홍보 효과 제고

2. 비전*: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

- * 고용노동부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모습(국민주권정부 임기내 달성)
-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할 의무(헌법 제10조), 국민의 존엄에는 생명(안전)에 대한 권리도 전제
-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+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를 내포, 제33조는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집단적 권리를 보장
 - 고용노동부는 헌법 제32조·제33조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행정 기관, 실현 방식은 국민의 존엄과 행복 보장
- ⇒ 정책 기본 철학이 되는 국민의 생명+행복 보장을 고용노동부의 역할인 노동 권리 실현으로 달성하겠다는 다짐을 비전으로 설정

3. 2026년 목표: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입증

- '친노동=친기업'을 입증해 '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' 실현 → "민주주의가 '밥' 먹여준다"(정권교체 후 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)

4. 미션*

- *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실천해야 하는 역할·행동

<1> (외부 미션) 일터 민주주의 실현

□ 왜 '일터 민주주의'인가?

- 과거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장시간·저임금 노동은 한계 직면, 고속 성장의 부작용으로 노동시장 격차 심화

- 저성장 국면 극복을 위해서는 격차 해소를 통한 국민 소비 여력 제고, 사회 혁신 여건 조성 필요(IMF, OECD, 한국은행 등)
- 새로운 성장 모델은 노동 배제형 성장이 아니라 노동이 동반자(주체)가 되는 성장*으로 재정의
 - * 근로기준법 제1조 목적도 “성장과 권리의 동시 달성(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·향상 + 균형 있는 국민경제)”을 정확히 규정
- 성장 부작용 회복 + 저성장 국면 극복을 위해 국가 개입을 통한 ‘일터(노동시장) 민주주의’ 실현 필요(‘광장’에서 ‘일터’로 K-민주주의 완성)
 - 고용노동부가 실천해야 하는 핵심 Mission

□ ‘일터 민주주의’란 무엇인가?

- ‘일터 민주주의’란 노동자가 인간다운 조건에서 일할 권리*(헌법 제32조)와 노동조건 결정에 참여할 권리(헌법 제33조, 개별법령**)를 보장받고,
 - * 일터에서 ①죽거나(노동안전), ②돈 떤다거나(공짜노동 근절), ③비슷한 일하고 차별 받는(분절화, 격차해소) ‘억울한 일’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는 것
 - ** 근로자참여법(노사협의회), 근로기준법(근로자대표), 산안법(산업안전보건위원회) 등
- 국가는 노·사간 대등한 힘의 균형하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
- 이를 통해, 노동시장 격차 해소로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적절한 소득 분배를 달성하여 헌법 제119조의 가치(경제민주화) 실현

〈2〉 (내부 미션) 국민에게 신뢰받는 우리 노동부 만들기

- 고용노동부 내부 혁신을 통해 ‘우리 노동부’가 되어 ‘일터 민주주의’와 ‘진짜 성장’ 구현을 뒷받침 → 외부 미션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전제조건
 - 국민 요구에 즉시 반응하는 적극 행정 노동부
 - 근로감독과 고용서비스에 AI를 활용하여 똑똑하게 일하는 노동부
 - 모든 정책의 기초로 생명·안전 감수성을 선도하는 노동부
 -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·공무직 처우 개선에 솔선 수범하는 노동부

5. 정책 과제

*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담아 간명하게 구성, 브랜드 개수도 최소화(2개)

정책 과제 1 “노동시장 격차 해소”

- (메시지) 노동시장 4대 격차(일할기회, 안전, 시간, 보상) 해소에 대한 민국 진짜 성장 동력 확보”
- (배경) 노동시장 격차 해소는 일터 민주주의 실현과 저성장 극복을 위한 필요충분조건

* IMF, OECD, ILO 등 국제기구도 한국의 노동시장 격차가 불평등의 핵심 원인임을 지적

I 존 롤스(John Rawls), 정의론(『A Theory of Justice』)

“사회적·경제적 불평등은 공정한 규칙을 통해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 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.”(차등의 원칙)

→ 격차 해소가 공정한 제도 설계의 핵심과제라는 철학적 논거

○ 주요 과제 및 정책방향

- ① (세부과제 1: **위험격차 해소**) ▲ 소규모 사업장 정책 길목 확보 + 산재예방 지원, ▲ 노·사의 참여와 책임 강화
- ② (세부과제 2: **공짜노동 근절**) ▲ 임금체불 근절, ▲ 포괄임금제 금지 등, ▲ 퇴직연금 적용 확대
- ③ (세부과제 3: **불합리한 격차차별 해소**) ▲ 개정 노조법 안착, ▲ 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, ▲ 공공부문 비정규직·공무직 처우 개선, ▲ 야간노동자 노동시간 관리방안 마련
- ④ (세부과제 4: **청년 일할기회 격차 해소**)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지속 발전

| | 취임 6개월 (안전, 제도기반 집중) | '26년 정책 방향 (분절화, 격차해소에 집중, 성과도출)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① 노동안전 | ▲ '노동안전 프로젝트', '체불=절도' 브랜드화 | ▲ 안전격차 → 소사업장 길목잡기 + 예방지원 ▲ 노사가 예방의 주체 + 안전일터 위원회 ▲ 야간노동 합리적 규제 |
| ② 임금절도 (공짜노동) 근절 | ▲ 제도적 기반 마련, 경각심 고취 | ▲ 체불 처벌강화 확행, 구조적 원인(하도급, 퇴직연금 등) 개선 지속 ▲ 포괄임금제(공짜노동) 합리적 규제 |
| ③ 격차 (차별) 해소 | ▲ 노조법 개정 (대화기반 마련) | ▲ 개정노조법 안착 + 초기업단위 교섭 확산 → 동일노동 동일임금 확산 (로드맵) ▲ 공공부문 모범적 사용자 확립 (실태조사, 비정규직 처우개선, 공무직委) |
| ④ 일할기회 격차 해소(청년) | ▲ 첫걸음 보장제 시작 | ▲ 청년 첫걸음 보장제 지속 발전(후속대책 포함) |

정책 과제 2 “노동있는 산업 대전환”

- (메시지) “기술·기후변화에 따른 전환 비용이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고, 노동의 소외·낙오 없이 변화에 적응하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”
- (배경) 직면한 대전환에서 노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동시 대응 필요
 - * ILO는 ‘정의로운 전환’을 사회적 대화 기반, 포용·형평, 관리되는 전환으로 제시
 -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, AI 기술 발전, 산업전환에서 노동 소외 시, 노동시장 격차 해소 효과 반감

Ⅰ 칼 폴라니(Karl Polanyi), 거대한 전환(『The Great Transformation』)

“인간과 노동의 운명을 시장에만 맡기는 것은 사회의 붕괴로 이어진다”

→ 노동을 시장 논리에만 두지 않도록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철학적 논거

○ 주요 과제 및 정책방향

- ① (세부과제 1: 포용적 노동시장 참여 확대) ▲ 중장년 경력 설계+재취업 지원, 단계적 정년연장 등, ▲ 일하는 부모 지원, ▲ 외국인노동자 통합 관리
- ② (세부과제 2: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) ▲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, ▲ 가짜 3.3 감독+노동자추정제, ▲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고용보험, ▲ 산업전환·지역맞춤 선제대응 강화
- ③ (세부과제 3: 모두의 AI를 위한 역량 지원) ▲ AI+역량 Up, ▲ 고용노동서비스 효율화, ▲ 실노동시간 단축
- ④ (세부과제 4: 새로운 산재 위험요인 대응) ▲ 한파·폭염 등 예방 강화, ▲ 안전까지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

| | 핵심 메시지 | '26년 정책 방향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|
| ① 인구구조 | 포용적 노동시장 참여 확대 | ▲ 중장년 세대상생 정년연장 + n모작 지원 ▲ 일하는 부모 지원(육아, 유연근무 등) ▲ 외국인 통합관리·지원체계 구축 |
| ② 모든 일하는 사람 |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| ▲ 일하는 사람 권리보호 입법 패키지+가짜 3.3 감독 (권리장전+추정제+분쟁해결 지원) ▲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고용보험 ▲ 산업전환·지역맞춤 선제대응 강화 |
| ③ AI 전환 | 일하는 모두의 AI | ▲ AI 일자리 로드맵 마련·추진 ▲ 일하는 모두의 AI 역량 Up ▲ 일터의 공정한 AI 도입·활용(가이드라인) |
| ④ 새로운 산업재해 | 새로운 산업재해로부터 일터안전 보호 | ▲ 한파·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산재 예방 강화 ▲ 안전까지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 |

☞ ‘노동시장 격차 해소’로 노동시장의 기본이 바로 서게 하고, 이를 토대로 ‘노동있는 산업 대전환’이 되도록 대응

6. 브랜드 체계도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|--|
| Vision |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| |
| Mission | 일터 민주주의 실현 * ('26년 목표) 노동과 함께하는 '진짜' 성장 입증 | |
| 정책 과제 | 1. 노동시장 격차 해소 | 2.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 |
| 브랜드 및 세부 과제 | <p>① 일하다 죽지 않도록 노동현장 위험 격차 해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소상공인 길목잡기+예방지원 ◆ 노·사의 참여와 책임 강화 <p>② 일하고도 돈 못 받는 공짜노동 근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임금체불 근절 ◆ 포괄임금제 금지 등 공짜노동 근절 ◆ 퇴직연금 적용 확대 <p>③ 불합리한 격차·차별 해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개정 노조법 안착 ◆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◆ 공공부문 비정규직·공무직 처우개선 ◆ 야간노동자 노동시간 관리방안 마련 <p>④ 청년 일할기회 격차 해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지속 발전 | <p>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노동시장 참여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중장년 경력 설계, 재취업 지원 + 세대상생형 단계적 정년연장 ◆ 일하는 부모 지원 ◆ 외국인노동자 통합 관리 <p>② 모두의 AI를 위한 역량 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AI+역량 Up ◆ 고용노동서비스 효율화 ◆ 실노동시간 단축 <p>③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◆ 가짜 3.3 감독 + 노동자추정제 ◆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고용보험 ◆ 산업전환·지역맞춤 선제대응 강화 <p>④ 새로운 산재 위험요인 대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한파·폭염 등 예방 강화 ◆ 안전까지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 |
| 내부 Mission | 국민에게 신뢰받는 '우리 노동부' 만들기 | |

Ⅲ. 지방청 업무보고

1. 서울지방고용노동청

III. 지방청 업무보고

1

서울지방고용노동청 <서울청장 권태성>

1. 산업재해·임금체불·청년고용 목표 및 시행방안

□ 산업재해 감축: **산업재해 zero, 우리의 목표!**

❖ 목표: 서울지역 중대재해 20% 감축

- 사고사망자 다수 발생하는 건설업 및 건물관리업에 대한 집중 관리 추진

- **(고위험 사업장 점검·감독)** ①「안전보건감독 계획」에 따라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, ②중대재해 발생 건물관리업체 운영 사업장(서울청 자체 선정) 등에 대한 상시 점검·감독

전략

- ▲ 업종별 협회와 협업하여 중대재해 예방 계도 활동 + 점검·감독 병행
- ▲ 고위험 100인(120억) 이상 사업장 전담 감독관 지정·관리(1인당 20개소)

- **(취약 사업장 상시 순찰)**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중·소규모 건설현장 및 건물관리업 사업장에 대한 집중 긴급자동차 순찰(3,000개소) 운영
 - * 건설현장 "추락 재해" 및 건물관리업 "사다리 작업 안전 수칙 준수" 중점 지도
- **협업** 안전공단 안전지킴이 및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을 통한 순찰과 이를 통해 확인된 불량 사업장의 감독 연계로 안전사각지대 해소
- **(유관기관 협업)** 지자체, 업종별 협회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단위 중대재해 예방 활동 확산
 - 지자체 협의체: 지자체 발주공사, 청소·하수처리·위탁사업 등 수행 사업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활동(분기별)
 - 업종별 협회 협의체: 건물관리, 도·소매, 인쇄, 주얼리 등 4개 업종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집중적인 중대재해 예방 활동(분기별)
 -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협의체: 중소 건설업체 대상 중대재해 예방 활동(반기별)
- **(안전의식 개선 캠페인)**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취약분야 대상 중대재해 예방 캠페인 전개
 -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: 현장종사자 『안전모 착용』 및 『사다리 안전수칙 준수』 캠페인(수시)
 - 퀵서비스 배달종사자: 사고 예방 및 안전배달 문화 확산 캠페인(취약기별)

□ 임금체불 근절: 임금체불 zero, 국민신뢰 100!

❖ 목표: 임금체불액 전년 대비 10% 감축

○ 체불사유별 대응을 통해 임금체불 발생을 최대한 억제

- 일시적 경영악화 상황에서도 인건비 절감을 우선 고려하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한 인식개선(체불은 절도) 교육·홍보 강화

* 사업주 설명회, 노동법 특강, 정책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·홍보 실시

- 다수 체불이력 기업 전담관리, 취약업종별 예방감독 등을 통해 체불 사전 차단

*본청 숙박·음식업 강남·서부 정보통신·도소매업 동부 택시운수업(고액체불) 관악 정보통신업

- 통상임금 등 법해석, 사실관계 등 다툼에 대한 신속한 지도로 체불발생 원인 해결

○ 발생된 체불은 신속히 청산

- 체불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'숨어있는 체불' 조기청산 및 관리(전담자 지정, 상시 모니터링)

- 상습·악덕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·통신영장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엄정 대응

- 고액·집단체불 사업장은 기관장 주도의 청산 현장지원

○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체불 예방 활동 강화

-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합동 감독 및 체불 예방 활동 추진

- 중재재해 예방 협의체 등 활용한 임금체불 예방 활동 추진

□ 청년 취업자 수 증대: 청년고용 up! 삶의 안정 up!

❖ 목표: 고용24 통한 청년취업 전년 대비 10% 증가('25년 9만명 → '26년 10만명)

○ 국민취업지원, 구직자도약패키지,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에 청년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취업 성과 제고

- 청년층 수요가 높은 고용서비스(잡케어, 입사지원 컨설팅, 알선) 확대하고, 참여자가 취업 성공할 때까지 사후관리(전담자)하는 체제 마련

* 국민취업(13,200명), 구도패(800명), 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(15,000명), 취업알선 등 지원

- **장기미취업 청년 등을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**
 - 국가장학생 청년DB(35천명),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통해 핵심지원대상으로 선정
 - 프로파일링하여 고용센터(11개소), 서울시, 서울시청년센터(17개소), 대플센터(20개소), 지역인자위 등과 협업하여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('26.2.~)
- 『**청년on라운지**』를 통한 자기주도적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
 - 1:1취업컨설팅('26년 700명), 모의면접(연12회) 등 실전 취업준비 지원 강화
 -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·공공기관에 대한 직무설명회(취업준비콘서트) 확대(연50회)
 - * 현대차그룹, LG전자, CJ, 코레일, 인천공항공사 등 49개사 “인재동행 멤버십”으로 지정 관리
- **청년친화기업 적극 발굴 및 매칭 강화**
 - 서울시, 상공회 등 사업주단체 등과 연계하여 콘텐츠 디지털IT 등 청년 선호 기업 중점 발굴(100개) 및 일경험, 취업 매칭

2. 청장 역점 추진사항

- **(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)** 중점 관리 사업장* 및 하청 有 노조 사업장 중심의 밀착 교섭 지도, 원·하청 상생 협력 모델 발굴 등을 통한 현장 안착 지원
 - * CJ대한통운, 하나은행, 롯데백화점 등 서울지역 11개소 선정 관리
- **(건설업·건물관리업 중대재해 예방)** 중대재해 다발 건설업과 건물관리업 중대재해 예방 사업 역점 추진
 - 기관장 주 1회 이상 감독관과 동행점검 또는 현지지도 방문 실시

- (건설업_현장 작동성 중심) ▲중소규모 현장 “긴급자동차 순찰” 추진, ▲재해예방 기술지도 전산시스템(K2B)의 지도결과(개선결과) 입력사항을 모니터링 등
- (건물관리업_타깃 관리 중심) ▲건물관리업 본사 중심의 서울 건물관리업협의회 운영, ▲“긴급자동차 순찰” 추진, ▲사다리관리대장 및 사다리작업허가제 운영 지도 등 사다리작업 타깃관리, ▲사다리작업 사고발생 사업장 특별교육(별칙성 교육) 등

- **(대졸 청년 취업지원)** 청년on라운지 안착, 대플센터 등 취업 유관기관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대졸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강화
- **(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)** 산재 예방, 근로조건 보호, 취업지원 등 다양한 고용노동정책을 현장에 효과적으로 전달·실현하는 인프라 구축
 - 중대재해 예방을 기본 목적으로 자자체, 업종별 협회, 산하기관, 재해 예방기관 등과 정기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면서 다른 분야로 확산

3. 국민 체감도 제고방안

- **(노사 등 이해관계자 참여)** 청년·노동·산재정책의 문제정의부터 정책 집행까지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현장의 의견 적극 반영
 - * (청년) 청년기자단 (노동) 양노총 서울본부, 경총 등 간담회 (산재) 안전문화실천 추진단
- **(홍보 다각화)** 청년기자단 확대·운영(청→지청별 운영), 청년 친화채널 (인스타, 카카오톡) 등을 통해 청년 눈높이에 맞춘 고용서비스 정보 제공
 - 우유 등 제조업, 방송업·호텔업 등 의식주 기업을 활용한 안전메시지 노출
- **(신속한 권리구제)** 임금체불 발생 시 즉시 개입 및 관련제도 안내 등으로 신속한 해결지원을 통해 체감도 제고
 - * 사건배정 후 48시간 내 유선확인 → 사업주 소명요구 및 1차 청산지도, 간이대지급금 및 사업주 용자제도 적극 활용

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붙임 | 1/4분기 성과 도출 과제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
| 노동시장 격차 해소 |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 |
|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중·소규모 현장 상시 순찰→노동안전 사각지대 해소 ◆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 지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한파 등 기후 취약계층 건강보호 강화 ◆ 가짜 3.3 관행 근절을 통한 인식 확산 ◆ 중장년 경력 설계, 재취업 지원 ◆ 일하는 부모 지원 |

- 중·소규모 사업장(현장) 상시 순찰을 통한 노동안전 사각지대 해소
 - 타깃 재해 예방 위주로 중·소규모 “건설현장”, “건물관리사업장” 상시 순찰
- 개정 노조법 현장안착 지원
 - 교육·설명회(~26.3월), 하청노조 교섭요구 예상 사업장 모니터링(주1회), 원·하청 상생 협력 모델 발굴을 위한 주요기업 간담회(수시)
- 한파 등 기후 취약계층 건강 보호 강화
 - 한파 비상대응반 운영(~3.15.), 한파·미세먼지 취약사업장 점검(~2.28.) 등
- 가짜 3.3 관행 근절을 통한 인식 확산
 - 기획감독 실시(서울 23개소, 25.12~26.1월), 감독종료 후 결과 집중 홍보 (보도자료 배포, 유사업종 협회 등 간담회), 후속 기획감독(26.2~3월 예정)
- 중장년 경력 설계, 재취업 지원
 - **(목표)** 중장년 친화기업 25개사 발굴, 경력지원제 150명 매칭(작년 목표 470명 중 32%)
 - 중장년 고용네트워크 활용, 일손부족 업종^{제조·운수·상고} 타깃 구직자·기업 발굴, 기업 수요 맞춤형 컨설팅, 단계별 취업지원 서비스(경력설계→직업훈련→일경험→보조금)
- 일하는 부모 지원
 - **(목표)** 모성보호급여 지원액 30%↑, 출산육아가 유연근무장려금 지원액 10%↑(전년동기대비)
 - 고용·노동협업시스템(노동·산안·지자체·유관기관) 구축,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참여기업 확대·정기상담(1:1맞춤형컨설팅) 등 지원제도 집중 홍보

2. 경기지방고용노동청

1. 산업재해 · 임금체불 · 청년고용 목표 및 시행방안

□ 산업재해 감축

❖(지표) '26년 50인(역) 미만 중대재해 15% 감축 중점 추진

★ (중기 목표) '30년까지 경기청 사고사망만인율 0.29‰로 감축

○ 소규모 사업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패트롤 점검 컨트롤 타워 구축

* **현장목소리** "같은 날 오전, 오후 경기도와 노동부의 중복 점검으로 현장 대응 부담돼..."

- 경기청안전공단·경기도 통합 '컨트롤 타워' 구축 → 패트롤(99,620회) 대상 조정
점검내용 공유(기타 자감이 교육, 실적통합관리 등), 노·사 3대 기초안전수칙 중점 계도(매회)

* 「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」 사업으로 경기도와 협업하여 지붕 개보수·태양광 등 추락재해예방 사업, 산단 위험성평가 지원, 외국인 노동자 역량 강화 추진 예정(예산 30억원)

○ 소규모 사업장 위험격차 'Zero' 프로젝트(상반기 경기청 시범, 하반기 소속지청 확산)

- 대규모 제조업체*의 2~3차 협력업체에 대해 원청 및 유관기관과 협업(합동 컨설팅, 체험교육 등) → 안전보건관리 격차 해소 및 산재 감소

* 반도체삼성(경기, 평택)+SK하이닉스(성남) 자동차기아(경기, 안양)+KG모빌리티(평택)+현대남양연구소(경기) 가전삼성(경기)+LG디스플레이(고양) 등 추진예정

○ 공공기관 분리 발주현장 안전관리 강화

<현상> 지자체·교육청 등 공공기관 발주현장에서 소방·전기·통신 외 소액·단기간 공사(자재구입·설치)도 분리 발주함에 따라 공사간섭 등으로 산재 다수 발생

- 지방국토관리청 등과 협업(MOU 등) → 공공기관에 소액·단기 공사 분리발주 자체 안전보건조정자 지정 및 혼재 작업 피악·조정 등 산안법상 역할 수행토록 지도

○ 물류협의회 등 민간 기관과의 협업 강화(상반기 경기청 시범, 하반기 소속지청 확산)

- 관내 주요 물류업체(CJ대한통운, 지마켓, 아성다이소, 쿠팡 등) 대상 안전보건협의회 자율적으로 구성 → 한과 폭염 등 새로운 산재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토록 지원

* 26.1.30. 협의회 발대식 및 안전보건공동선언식 추진

- 사고 위험성이 높은 레미콘 제조업체 등 안전보건협의회 자율 구성 확대 유도

□ 임금체불 근절

❖(지표) 예방감독 물량 40% 확대를 통해 '26년 체불액 전년대비 10% 감축

○ 체불예방을 위한 예방 감독 대폭 확대 실시('26.2월~)

- **(타킷팅 감독)** 청내 체불 현황 분석 및 '26년 사업장 감독 추진계획에 따라 취약업종* 및 고위험사업장(반복·다수·장기체불 등) 중점 기획감독 실시

* (제조업) 경형 관내 체불액 35%, (건설업) 체불근로자수 30%, (도소매음식숙박업) 체불사업장수 28% 차지

- (지자체 등 타부처 협업 강화)

- ① **(일반)** '25년 경기도 합동 점검(컨설팅 포함) 성과 분석을 통해 합동 점검 업종, 점검방법 등 세부 협업 방안 마련 추진(1/4분기~)
- ② **(관급공사)** 발주처(국토부, 지자체)와 합동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
- ③ **(외국인)** 지자체(외국인지원상담센터)와 연계, 상담내용 공유 등을 통해 체불 의심 사업장 등 확인 → 법무부(출입국관리소) 합동 점검을 통한 체불예방 강화

- **(전수조사 내실화)** 신고사건 상시 모니터링(2주 단위) 실시 후 우수사례 적극 발굴 및 전파, 관내 산업단지공단 및 사업주 단체* 통해 체불예방 활동 강화

*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, 화성산업단지관리공단, 경기경영자총협회 등

○ 신속한 체불 청산을 통한 노동자 권리구제 강화('26.2월~)

- **(청산기간 운영)** 설, 추석 명절기간 체불 집중 청산 기간 운영 기관장 현장지도 강화, 체불 신속 대응 및 고액체불 사업주 강제수사 신속 추진

- **(체불스쿼드 운영)** 중요사건 체불청산을 위해 상시대응팀 구성, 다수고액 체불 사건 (1억원↑ or 30인↑) 신속 청산지원 필요시 검찰과 협조하여 강제수사 적극 추진

* (구성) 팀장(노동기준1과장), 팀원(수석감독관, 상황팀장, 광역감독팀장, 노동기준2과팀장 등)

- **(외국인근로자)** 노동권익센터, 외국인보호소 등 연계, 찾아가는 체불 상담·지원

- **(체불관리강화)** 다수고액 및 집단 체불 사건 대책 회의 정례화(청장 주재, 월1회)

- **(강제수사 활성화)** 신규 감독관 대상 멘토링 교육시 강제수사 교육 및 집행실습, 인센티브 부여(포상휴가 등)를 통한 강제수사 활성화

□ 청년고용 촉진

❖ (지표) 경기 권역 청년(15~29세) 고용률 **48.6%** 달성(3개년 평균)

* 경기권역 청년 고용률 최근 3년간 청년 고용률 감소('23년 49.9% → '24년 49.5% → '25년 46.6%) 추세로 고용률 반등을 위한 노력 필요

↳ (세부지표) ①경기청 권역 「고용24」 청년 취업자수 3년 평균의 110%(79,796명) 달성, ②국취 청년 참여자수 3년 평균의 110%(41,539명) 달성 ③직업훈련 참여 청년 3년 평균의 105%(55,825명) 달성

○ 「청년고용 TF」 구성·운영

- 고용센터 내·외부에 분절되어 있는 청년사업 총괄·조정 기능 강화(상반기 수원센터 시범, 하반기청 소속 센터 확산)

* (구성) 경기청장을 TF팀장으로 수원센터내 설치, (역할) 청년고용 동향파악, 사업간 연계 등

* <청장 역점사업> 청년고용 TF 내 반도체 특화고용센터 취업지원 협의체 별도기구 구성

○ 미취업청년 취업지원 강화

-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미취업 청년 맞춤형 서비스 「다가가기→취업 지원→일할기회」 제공 등 취업지원 강화

- ①(다가가기) 미취업 청년 DB활용「취업톡톡」통해 필요서비스 안내·연계, 지역내 대학·특성화고·군부대 등 협업 찾아가는 홍보 등 청년정책 안내·연계
- ②(취업지원) 유관기관·대학 통해 발굴된 미취업 청년 특성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, 직업훈련 및 장기 미취업청년 심리안정프로그램 우선 지원 등 취업지원 강화
- ③(일할기회) 청년 대상 채용관·취업특강 등 청년 구직자 지자체 협업 일자리박람회 및 일자리수요데이 개최로 취업기회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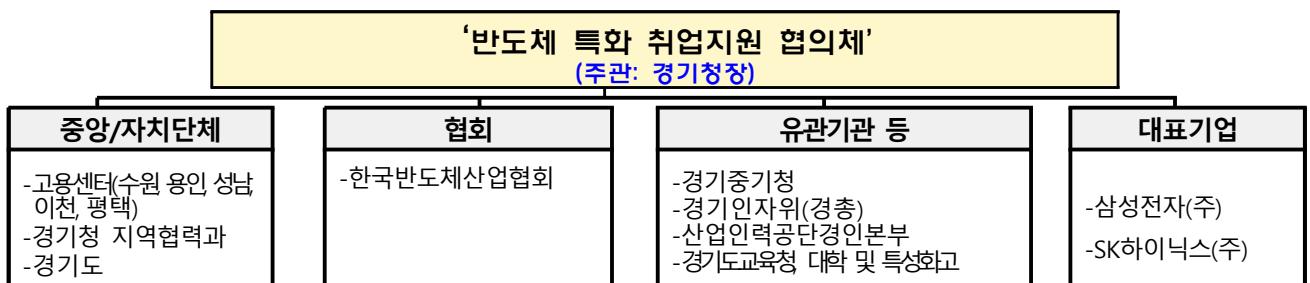
2. 청장 역점 추진사항

□ 청년고용 반도체 특화 취업지원 협의체 구축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

○ (추진방안) 「반도체 특화 취업지원 협의체」 구축·운영

- (구축) 반도체업 밀집지역(수원·성남·평택·용인·이천)* 특성에 맞는 경기도 광역 단위 반도체 특화 취업지원 협의체 구축(반도체 특화고용센터 사업 연계)

* (경기권) 전국 반도체 생산액의 78%, 사업체수 48%, 종사자수 64.8% 차지



- **(역할)** 협의체 중심으로 민·관·학이 협업하여 청년고용 활성화
 - ① **(민·관·학 참여)** **민**반도체실습·공정체험·기업탐방 기회 확대, **관**고용장려금·지자체 각종 기업지원 연계 및 훈련과정 기획 지원, **학**지역내 대학·특성화고 협업 등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발굴·제공
 - ② **(협업·소통)** 경기청 주관 반도체업 집중지역 센터간 협업하여 합동 채용박람회 개최 및 각종 지원 연계, 협의체간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청년 취업 확대 방안 및 기업 구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공동과제 발굴 추진
- ☞ 청년 취업 활성화 유도 및 반도체 기업 인력수급 문제 해소 지원

□ **산업안전** Black Spot(사고 다발 지점) 지정·운영을 통한 집중 관리

- **(추진방안)** 중대재해 발생 다발 지역(또는 업종)은 **Black Spot** 선정하여 패트롤 점검 및 기획감독(점검) 등 집중점검 실시
- **Black Spot** 지역 및 인근 사업장 경각심 고취 → 자율적 안전관리 확산 유도
- * Black Spot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산업안전지킴이 사업 추진토록 유도(화성시 사례 참조)

※ 2월 중 경기청장 주재로 소속 지청, 공단, 협회 등 안전보건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 ⇒ **산재예방 원팀 공동전략 수립**

* 하반기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합동 워크숍 추진

3. 국민 체감도 제고방안

- 「**우리 경기고용노동청**」 만들기 프로젝트
- 1,400만 경기도민의 신뢰도 제고 및 청 위상에 걸맞은 홍보 이미지 재정립을 위한 경기청 **홍보 프로젝트** 계획 수립 및 시행('26년 3월~)
- **(온라인)** 경기고용노동청 홍보 유튜브 채널 개설 → 고용·노동·산안 분야별 주요 홍보사항 **숏폼** 등 콘텐츠 제작 및 **송출**(매월)
- **(오프라인)** 지역 주요 언론사 등 기고문·보도자료 배포,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정책 홍보 설명회·캠페인 등 실시(수시)
- * **(분야별 집중홍보)** <고용>반도체특화 고용센터, <노동>"임금체불=임금절도" 홍보 강화 대국민 인식개선, <산안>산재예방 캠페인, 기후변화 대응 안전수칙 등
- * **(건의사항)** '우리 경기고용노동청' 만들기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홍보 예산 요청

| 노동시장 격차 해소 |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 |
|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노동현장 위험 격차 해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패트를 점검 컨트롤 타워 구축 ② 개정노조법 현장 안착 지원 ③ 경기고용노동청 임금체불 근절대책 수립 추진 ④ 청년고용TF 및 반도체 특화고용센터 운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새로운 산재 위험요소 대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미디어 매체 활용하여 폭설·한파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 수칙 신속 전파 |

□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'패트를 점검 컨트롤 타워' 구축·운영

- (내용) 경기노동청-안전공단-경기도를 통합하는 '컨트롤 타워'를 구축하여 기관별 패트를 대상 조정, 점검내용 공유 → 점검의 효과성 극대화

◆ ('26년 패트를 물량: 총 99,620회) 경기청 권역 6,470여개<전국 3만개>, 안전공단 43,150여회 <전국 20만회> +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42,000회<112명>+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 8,000회<50명>

※ (제조 등) 50인 미만 업체 65만 개소(패트를 5만), (건설) 5억원 미만 21만 개소(패트를 5만)

- (추진전략) ①(사전)업무회의(점검대상 선정 등) 및 지킴이 교육, ②(점검)추락 중심의 공동 체크리스트 사용, 기관별 실적 통합관리, 감독·재정지원 연계, ③(이슈별)일제 단기간 집중 점검, ④(홍보)기관장 참여, 캠페인

* (점검Point) (제조·기타업)사다리·개구부, (건설업)지붕·단부·사다리·고소작업대(차)

□ 개정노조법 현장 안착 지원

- (내용) 노사법치 확립 및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원·하청 대화 촉진 및 노사 분쟁·갈등 해결 지원
- (추진전략) 경기청 중심 중점관리 사업장(삼성전자 등 8개소) 등 주요 기업, 노사단체, 업종별 협·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(26.1월~), 설명회(26.2월~) 실시

□ 경기고용노동청 임금체불 근절대책 수립 추진

- (내용) 경기노동청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종합 대책 수립(1/4분기)
- (추진전략) 경기청(소속기관 포함)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 회의(1/4분기)
 - 기관장 현장 활동 강화, 다수·고액 체불 사업장 관리, 신고사건 전수조사 내실화, 강제수사 활성화, 사업장 감독 관리, 주요 사례(감독, 전수조사, 강제수사) 보도

□ 청년고용TF 및 반도체 특화고용센터 운영

- (내용) 지자체·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협업, 미취업 청년 선제적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통해 미취업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
- (추진전략)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청년고용TF 및 반도체 특화고용센터 집중 운영 통해 지역내 미취업 청년 맞춤형 서비스 「다가가기→취업 지원→일할기회」 제공(상시)

3. 중부지방고용노동청

1. 산업재해·임금체불·청년고용 목표 및 시행방안

□ 노동현장 격차 해소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일터 만들기

❖ (지표1)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사망사고 20% 감축

○ 태양광·축사 공사 등 초소규모(5억미만) 건설현장 관리 강화

- (달성방안) 협·단체* 등을 활용하여 현장 현황 파악, 회원사 정례회의 시 안전교육 지원(공단 재정지원사업** 병행 안내) 및 현장 지도·점검 실시

* 한우·한돈협회, 태양광산업협회, 전문건설협회 등

** [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사업(떨어짐)] 10인 미만 사업장 중 공장·축사 보유 사업주에게 안전대 부착설비 등 연간 9천만원까지 지원

- (“길목”활용) 추락재해예방 업무공유방* 운영, 유관 협·단체와 간담회 개최(분기), 공단 지킴이 활용해 현장 모니터링 후 합동 지도·점검 및 캠페인 전개(매월)

* 노동부, 안전공단, 지자체, 한국에너지공단, 축사태양광 협·단체, 재해예방기관 참여

○ 소규모(50억 미만) 건설현장 집중 관리 및 패트롤 강화

- (달성방안) 공단 패트롤 점검 결과(위반건수),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을 분석하여 청 주관으로 공단, 재해예방기관과 위험지역·소규모현장 밀집지역 등 중점 패트롤 실시(매월)

- (재해예방기관 간 “협업” 강화) ①재해예방기관 불량현장 통보 확대(3→6%)
②재해예방기관 및 공단 패트롤시 극히 불량한 현장(지적건수 5건 이상 등)에 대해서는 즉시 통보하여, 노동부에서 즉시 감독 착수

- (지방정부 등 “협력”) 공공발주 현장 대상 발주자와 합동점검 실시(매월)

❖ (지표2) 고위험 운수·창고업 부딪힘사망사고 40% 감축

○ 고위험 운수·창고업 산재예방 네트워크 구축 및 체계적 점검·감독 추진

- (달성방안) 물류업계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, 협업기관 공동 캠페인 등을 통해 안전 감수성 제고 및 점검·감독 강화

- (“길목”활용) 물류업 유관 협·단체 등이 참여하는 물류안전보건협의체 구성·운영하여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자율예방체계 구축토록 지도

- (감독 강화) ①체계화: 패트롤 점검(노동부+공단, 고위험사업장의 10%)
→ 불량사업장 기획감독(패트롤 물량의 10%) → 초고위험 사업장 확인감독
(기획감독 물량의 10%, 분기), ②협력화: 지자체 등과 부딪힘재해 예방 합동점검 실시(분기)

□ 체불 근절을 위한 “숨은 체불” 청산 강화 및 체불취약 업종 집중 관리

❖ (지표1) 임금 체불액 전년 대비 10% 감축

- '30년까지 체불액 절반(50%) 감축 목표 고려

- (전수조사 사업장 확대) 재체불, 고의·상습 등 노동관계법 전반의 사업장 감독이 필요한 경우 신고형 감독으로 전환*하여 사후관리 강화
* 조사·감독 부서 협의체를 통해 감독 대상 발굴(분기)
- (업종별 관리) 지자체와 「임금체불 예방 MOU」 체결(2~3월) 및 부서 간 협업으로 임금체불 취약 업종별 관리 강화
- (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) [홍보]건설업(도시주택과), 음식점업(위생정책과) 등 소관부서와 임금체불 예방 캠페인(분기), [합동점검]건설현장 등 체불 취약 업종 감독 시 소관부서와 합동 점검(반기) 추진
- (부서간 협업) [건설] 건설현장 산재 지도·점검 시 체불 근절 및 기초노동질서 안내문 배포, [산안] 상습체불·재해우려 기업은 노동·산업 통합감독
- (강제수사 추진) 고의·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강제수사*를 적극 추진하여 사회적 경각심 제고

*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현황: ('25년) 111건, ('24년) 302건, ('23년) 244건

□ 청년 구직자 역량강화 및 밀착서비스 제공으로 청년 고용 촉진

❖ (지표1) 청년 취업자수 직전 3년 평균 대비 10% 증가(3개년 평균 49,646명 → 26년 54,610명)

- 적극적인 일자리 발굴과 역량 향상 도모로 청년 취업자수 증가

- (1단계 발굴) 청년 유관기관 협의체 등 청년지원 네트워크*를 활용하여 청년 구직자 적극발굴

* ①지자체 협의체(인천사군구 일자리센터(12개)), ②지립준비청년(인천시-내, 지립지원전담기관), ③기정·학교부(장단기 쉼터 등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10개 기관, 학교부청소년지원센터), ④고립은둔·가족돌봄(청년미래센터, 신복위, 서금원, 남동새일), ⑤준비중 청년(사군구청년지원센터(9)), ⑥병역이행(인천병무지청), ⑦중부권역(인천-부천) 직업계고, 대학생(고용센터(3), 대플센터(6), 졸업특화운영대학(2), 한국폴리텍인천, 인천시, 인천시 교육청, 인천인자위)

- (2단계 역량)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 지원
 - * ①멘토링(셀트리온·삼바 등 대규모기업 멘토링Day, 직업전문가 멘토링(40개 직종)), ②항공일자리 등 인턴형 일경험프로그램 등 연계, ③바이오 &뿌리 산업 이해도 향상 프로그램 신규 운영, ④인천&부천준비중청년 REBOOT 서비스 『심리지원(치유농업 등)-역량강화-1:1상담-취업지원의 단계별 밀착지원』 등 프로그램 지속 발굴·지원 ⑤지자체 협업 청년도전지원사업
- (3단계 취업) 우량 구인기업 발굴, 지원정책* 연계 및 일자리수요데이, 동행면접 등 채용지원 활성화로 취업자수 54,610명 달성
 - *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, (인천TP) 재직청년복지포인트(1년 120만원, 분기 지급), (인천경총) 뿌리청년 일할맛남(구내식당 식단품질개선비용지원사업), 뿌리미래푸드트럭(1인 1만원 상당 간식 및 음료제공) 등

2. 청장 역점 추진사항

- (체불현장 대응력 강화) 고액(1억)·다수(30인) 임금체불 사업장의 경우 청장 직접사업장 방문하여 지도 점검 및 안전관리 취약요인 발굴
- (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·운영) 노동부-공단-지자체-재해예방기관-업종별 협·단체 간 주기적 간담회 개최(분기) 및 합동 현장점검 실시, 노동부-지자체-경영자총연합회 안전·체불 예방 교육 실시(분기)
- (권리 밖 취약노동자 소통창구 운영) 권리 밖 취약노동자의 애로·고충 사항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담회* 등 소통창구 마련(분기)
 - * '25.12.8 중부청, 만특고-플랫폼노조 집행부 및 조합원(약 11명)과 경청 간담회 개최
- (노조법 2·3조 현장 착근) 법 시행 이전 원하청 상생모델 발굴* 및 확산, 주요 사업장 교섭 상시 모니터링 점검(격주 회의 개최)
 - * 인천교통공사, 인천항만공사 등 관내 공공기관 우선 대상

3. 국민 체감도 제고방안

- (안전사진·샷츠 공모전 개최) 사업주, 근로자, 대국민 대상 공모전 개최하여, 우수작 청장 표창 및 교육자료로 배포·활용
- (외국인근로자 현장소통 강화) 외국인 고용사업장 감독·산안 합동점검시 통역원 동행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인권침해 요소 파악·개선
- (개정 노조법 지역 내 공론화) 지역 노사단체(경총 등) 주관 토론회 참석 및 관내 기업 대상 노조법 2·3조 설명회 등 개최

| 노동시장 격차 해소 |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 |
|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◆ 개정 노조법 안착 지원을 위한 교섭체계 구축 ◆ 미취업 청년을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·운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및 취약사업장 안전보건지원 강화 ◆ 일하는 부모 지원 ◆ 지역산업특화 고용센터 운영 |

- **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및 취약사업장 안전보건지원 강화**
 - (소규모 건설현장) 추락재해예방 협의체* 간담회 개최(2월), 태양광, 축사 등 추락위험현장 발굴 및 사고발생 위험지역(레드존) 파악하여 교육 지원 및 현장 지도·점검 실시(3월)
 - * 노동부, 안전공단, 지자체, 한국에너지공단, 축사·태양광 협단체, 재해예방기관으로 구성
 - (운수·창고업) 인천시 물류정책과와 간담회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(2월), 안전공단, 인천시, 물류 협·단체 등과 물류안전보건협의체 구성(3월), 운수·창고업 취약사업장 발굴하여 방문교육 및 패트롤점검 실시(3월)
 - (농업, 임·별목업, 관광업) 농번기 대비 유관기관(강원도, 농업기술원, 경찰 등) 간담회 개최(2월), 농업기술원 온열질환 예방 현장지도요원 교육(3월), 별목 집중시기 대비 산림청·강원도와 합동점검·교육(2~4월), 춘천시·안전공단과 지역축제 안전관리 회의 개최(2월), 지역축제 시설 설·해체 현장점검(3월~)

- **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**
 - (내용)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
 - (시기) '26. 2 ~ 3월
 - (추진전략) 근로감독협의체 온·오프 핫라인(정기 회의, 단체 카톡방 등) 운영을 통하여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및 기타 협의사항(전보 채용, 교육일정) 등 공유

- **개정 노조법 안착 지원을 위한 교섭체계 구축**
 - (내용) 노사법치 확립 및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원·하청 대화 촉진 및 노사 분쟁·갈등 해결 지원
 - (추진전략) 개정 노조법 현장 지도를 통해 연착륙 지원 및 원하청 노사간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

| 시기 | 내용 |
|----------|---|
| '26년 1분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개정 노조법 현장지원 T/F 구성·운영 및 학습조직 운영을 통해 지침 등 숙지 ◆ 관내 원·하청 중점관리사업장 선정* 및 지도·모니터링 실시(계속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선정기준) ▲1,000인 이상+하청 2개 이상+제조업·공공기관 ▲기타 원하청 노사 취약사업장 ◆ 관내 주요 노사단체, 협회 등과 간담회 개최 등 현장소통 강화 ◆ 관내 원·하청 교섭준비 기업 컨설팅 등 교섭 지원 및 상생모델 발굴 노력 |

□ **미취업 청년과 중장년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**

- (내용) ①중부청 미취업 청년 대상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(멘토링Day, 준비중청년 대상 『심리-역량강화-1:1상담-취업지원』, 청년취업 REBOOT 서비스 등), ②중장년 경력전환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- (시기) '26. 1월~3월
- (추진전략) ①미취업청년 각 청·지청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, 청년센터 등을 연계하여 청년고용네트워크 구축·운영(①찾아가는 상담소 운영, ②특화서비스 제공)
②중장년 중장년 관계기관*과 네트워크 구축 진행(①중장년층 구도파 확대, AI활용 취업 특강 개설, ②중장년 맞춤형 경력설계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·협업 구축, ③1:1 경력설계 상담지원)
* 중장년내일센터, 중장년경력지원제 민간운영기관, 한국폴리텍대학, 새일센터, 지자체 등

□ **일하는 부모 지원**

- (내용) 신규·개편* 지원 제도 홍보 강화 및 대상기업 발굴 노력
* (신규) 단기 육아휴직 도입(예정), 육아기 10시 출근제, (개편) 모성급여 상한액 인상, 대체 인력·동료업무분담지원금 단가 인상
- (시기) 상시 및 '26. 1월~4월
- (추진전략) ①(홍보 강화) 유관기관·자체 설명회 개최(1월~4월), 관내 공공기관 홍보 영상·리플릿 배포(상시), ②(대상기업 발굴)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컨설팅 연계 지원금 활용 유도 등 기업 발굴, ③(지원금 지급) 정기적 모니터링으로 지원금 신속 지원

□ **제약바이오·뿌리·항공물류 중심의 지역산업특화 고용센터 운영**

- (내용) 구인·구직·훈련수요 등을 토대로 특화업종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| 업종 | 대상 | 지원내용 |
|-------|-----|--|
| 제약바이오 | 청년 | 삼성바이오로직스 멘토링DAY, 셀트리온 바이오헬스아카데미(KDT) 훈련 |
| 뿌리 | 중장년 | 한국폴리텍 남인천캠퍼스 뿌리산업특화교육센터(기계, 표면처리(도금), 특수용접) 훈련 |
| 항공물류 | 여성 |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일경험프로그램(티웨이항공 카운터, 탑승구, 도착장 등) |

- (시기) '26. 1월~(지속)
- (추진전략) ①경제단체, 업종별 협·단체, 지역인자위, 지자체 등 유관 기관 간 구인·훈련수요·과정개발 등 집중 논의(~2.15.), ②업종에 따른 구직자 유형별 취업지원을 위한 기관 간 사업 연계 로드맵 작성(~2월), ③업종별 분과협의회 운영(센터, 지협과), 부서간 유기적 협력 강화로 특화사업 발굴·추진(사업초기 수시, 2분기부터 월1회)

4. 부산지방고용노동청

1. 산업재해 · 임금체불 · 청년고용 목표 및 시행방안

□ 산업재해 예방

❖ 건설업 중대재해 40% 이상 감축 → 부울경 전체 사망사고 20% 감소

○ 튼튼한 협업·촘촘한 예방활동을 통한 사망사고 감축

①(지방정부 협업) 부,울,경 광역·기초 권역별 “재해예방협의회” 구축, 운영 → 취약사업장* 정보공유 및 자치단체 ‘지중해’ 사업과 연계, 지역단위 합동 특화점검 (월2회)

* ‘25년 안전일터프로젝트 점검(부울경 4,200개소) 결과 위험도 반영, 대상 조정 및 추가 발굴

②(건설) 소규모 건설현장 사고 감축을 위한 ‘갈매기 건설특공대*’ 편성, 2인 1개조로 50억 미만 사업장 대상 패트롤 점검(연내 40,000개소 목표),

* 총 311명(감독관 105명, 공단 직원 45명, 공단 안전일터 지킴이 108명, 지자체 지킴이 53명)

- 최근 2년간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시공현장,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(추락, 붕괴) 현장 불시점검 등 특별관리

③(제조·기타) 고위험(소규모) 업종에 대한 소통체계(지방정부, 안전공단, 업종별 협의체) 구축과 맞춤형 산재예방 원스톱-안전솔루션* 제공

* (예시) 부산지역 해운항만, 수리조선, 뿌리산업에 대한 ①길목확보→②교육·홍보→③재정·기술지원→④점검·감독(1.28 청,공단, 5개 협회 MOU 체결 예정)

④(조선) 주요 7개 조선사* 안전지킴이(42명) 상주 및 상시 패트롤 점검

* HD현대중공업 등 ‘부울경 조선업 안전협의회’ 개최, 각사별 안전대책 점검 및 실행력 제고

○ 꼼꼼한 확인을 통한 안전수준 취약 사업장 사후관리

①(중대재해 사업장) 사고원인, 안전관리체계 적정성 정밀감독 → 업종문책, 근원적 재발방지대책 강구, 불시 확인감독

②(중상해재해 사업장) 추락, 질식, 화재, 폭발로 인한 ‘중상해재해’ 발생 사업장 대상 신속 기획감독 및 중소사업장 등은 공단과 연계 기술·재정지원 병행

□ 임금체불 감축

❖ 「The-하기(+)」 전략 추진 ⇒ 체불노동자 30%, 체불사업장 20%, 체불액 10% 감축

- (The-꼼꼼한 목표관리) 청·지청내 「체불상황팀*」 설치, 업종별·지역별·규모별 체불 현황 모니터링 → 체불원인 진단, 분석 및 대책 수립
* 월1회 청장 주재 청관내 체불상황 점검회의 개최, 기관별 성과관리
- (The-숨은 체불 예방) 전수조사 반복 신고 사업장 체불 적발, 타깃감독 청년·외국인 등 취약노동자 선제적 권리구제, 합동감독 노동·산안 현안 사업장 및 복합 문제 사업장 근본 원인 제거
* 25년 4,307건 감독(외국인 44건) 실시, 26년 청년·외국인 2배이상 감독물량 확대
- (The-엄정한 수사) 상습·고액·집단 체불 등 악덕 사업주 대상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 * '25년 구속 6건 → '26년 구속 10건 이상 목표

유관기관 등 협업

- (국토부) 건설현장 합동 점검 실시 → 건설현장 하청노동자 임금 직불제도 도입 유도
- (지방정부) 합동점검, 캠페인 실시 →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, 지역의 체불에 대한 인식 개선
- (업종별 협·단체) 임금체불 예방 MOU 체결, 분기 1회 노무관리 교육 → 체불 사전 예방
- (근로복지공단) 대지급금 신속 지원, 사업주용자제도 안내 협업 → 사업주 자체 청산 유도

□ 청년고용 촉진

❖ 미취업청년 대상 고용서비스 11만명 제공(최근 3년 평균(9.7만) 대비 10% 이상 증가)

* 미취업청년 적극 발굴로 고용센터의 게이트웨이 역할 강화

- (청년발굴) 내부 청년 DB, 실업급여수급자, 고용24 구직자, 외부 네트워크 기관별 참여 청년 중 심·미취업 청년 발굴* → 지원대상 Pool 구성·관리(+1.3만)
* 부산 고용서비스 촉진 흥미유발 체험형 「찾다추 프로그램」(일 4~5시간 월 1~2회 다들 훈련기관 협업) 운영
- (고용서비스) 기관장 주도, 지역 우수기업(대기업·공공기관·중견기업) 발굴로 직무설명회 및 일경험 연계, 고용센터의 청년고용정책 게이트웨이 역할 강화
- 유관기관별 역할 분담으로 청년친화 일자리 발굴부터 역량강화·일경험, 취업·직장적응까지 패키지 지원
* 부산 청년잡(job)고 프로젝트: 청년 특성별(쉽청년·구직의욕(低)·구직역량(高)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('25년 6,749명)
- (지방정부 협업) “부산지역 해양산업 특화고용센터” 운영('26.2월 발족), 중앙-지방정부 협업사업**으로 지역청년 정착 지원
* B-Marine 커리어 패스: 현장 수요 기반 직업훈련, 역량강화·일경험, 장려금 연계 일자리 매칭으로 해양산업 인력 수급 지원
** 부산 부산청년 취업성공풀(Full) 패키지: 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+ 부산시 청년취업도약지원금
- (지원체계) 내부 기관장 직속 청년고용TF 구성·운영으로 성과목표 상시 관리, 외부 청년고용네트워크 확대*로 청년 정책 체계적 지원
* 부산지역 해양산업 유관기관(지자체, 부산해수청 등) 추가 구성 → 해양산업 특화서비스 제공

2. 청장 역점 추진사항

□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 지원

❖ 지역내 자동차, 조선, 기계, 석유화학 등 주요 제조업 밀집, 다양한 유형의 원·하청 관계와 노사갈등 요인 상존

→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 및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한 선도적 역할 필요

○ (추진과제) 개정 노조법 2·3조 현장 안착 및 노사갈등 예방

○ (추진방안) 기관장 중심, 중점관리사업장 1:1 밀착 지원

☞ 노사가 합의에 기초한 자율적 해결 방안 모색할 수 있도록 지지적 역할 수행

| 단계 | 세부 추진 방안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법 시행 前 (준비단계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(관리체계 구축) 부울경 지노위와 함께 『노조법 2·3조 개정 현장지원 T/F』 확대 개편, 협업 및 유기적인 대응 체계 구축 ■(대상 선정) 현대차, 현중, 한화오션 등 본부·자체 선정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(12개소) 및 관내 1,000인 이상 주요 사업장 자체 관리 ■(기관장 전담 관리) 노사동향 중점 모니터링 → 적기 노사단체 및 사업장 현장방문 → 법시행전 불필요한 갈등 요인 해소 지원 |
| 법 시행 後 (갈등단계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각 교섭 단계별 갈등 관리 지원 및 현장 대응 시스템 가동 ※ ①하청 노조(지부·지회)신설 ②원청 상대 교섭요구 ③교섭진행 여부 ④개정법 교섭트랙·절차 이행여부 ⑤노동쟁의&쟁의행위 발생 및 대응 ⑥소송진행 등 |
|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컨설팅 추진 → 상생교섭 모델 발굴 → 모범사례 확산 - 법 시행 전 민간·공공 부문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- 교섭단위 및 의제 협의, 법 시행 이후 안정적 단체교섭 개시 ■ 지역내 언론, 시민, 노동단체 등과 연대, 원하청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 |

3. 국민 체감도 제고방안

□ 일상 속 홍보 노출 확대

○ (내용) 주요 성과(산재·체불 감축, 청년 고용 등) 홍보 콘텐츠* 제작,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플랫폼**에 게시하여 정책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노출 확대

* 동영상·숏폼, 카드뉴스·사진 등 다양한 형태 제작

** SNS(유튜브·인스타 등) 게시 및 옥외·현장(플래카드·홍보 현수막 등) 홍보 매체 활용

○ (구성) 기관별 콘텐츠 제작자·관리자 지정하여 관리 체계 구축, 권역별(청·동부·북부 부산, 울산·동부(예정) 울산, 창원·양산·진주·통영 경남) 홍보 협의체 구성하여 행정단위 홍보 한계 보완

○ (추진) 기관별 담당 지정·권역별 협의체 구성 → 콘텐츠 제작 및 공유 → 합동 콘텐츠·기획 보도자료 등 배포 → 합동 기자간담회 추진

| 노동시장 격차 해소 |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 |
|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임금·복지 격차해소 ◆ 산업안전 위험 격차 해소 ◆ 미취업 청년 체계적 발굴 및 지원 강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부산지역 해양산업 특화고용센터 운영 |

□ **임금·복지 격차 해소**

- (내용) ‘진짜 사장’과의 실질적 교섭을 위한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, 임금·복지 격차 해소를 도모하여 원·하청 상생의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
- (시기) 2026년 2월~11월
- (추진전략) 원·하청 상생협력 모델 발굴 노력, 중·소 산단 및 취약 근로자의 노동 격차 해소와 의견청취* 통해 맞춤형 격차 해소 추진
* 언론, 간담회, 노사민정협의회, 교섭요구안 등 다방면 발굴

□ **산업안전 위험 격차 해소**

- (내용) 현장 밀착형 산재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소통체계 구축과 업종·규모별 맞춤형 산재예방 서비스 제공
- (시기) (1월)업종별 협의체 MOU체결, 주요 7개 조선사 CSO 간담회, (2월)갈매기 건설특공대 발대식
- (추진전략) 지자체(부산시 등)·관계 부처(국토부, 해수부)·업종별 협·단체 등 (예시: 조선업, 해운항만업, 건물관리업)과 협업을 통한 정책·교육·사고사례 전파

□ **미취업 청년 체계적 발굴 및 지원 강화**

- (내용) 미취업청년 대상 「발굴-다가가기-서비스제공」 청년 일할 기회 확대
- (시기) 기초상담 전담자 지정·운영(고용·대플, 1월) → 청년지원센터 확대(2월, 간담회 예정) 청년 특성별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(3월)
- (추진전략) 전달체계별 전담자 지정 및 청년 Pool 구성·관리, 청년 선호 체험형 프로그램(월 1~2회, 선호 프로그램 설문) 운영 등으로 정책 참여 유인

□ **부산지역 해양산업 특화고용센터 운영**

- (내용) 청·지청 컨소시엄 형태로 부산지역 해양산업 특화 고용센터 운영
- (시기) 계획 수립(1월)→ 발족(2월)→채용·취업지원 프로세스 구축(3월)
- (추진전략) 해양산업 특화 대상별 네트워크 공동 프로젝트 추진(지역고용네트워크 활용)
* [구직자] 현장수요 기반 산대특 훈련 과정 운영 → 역량강화일경험 → 일자리 매칭·장기근속 지원
[기업] 채용여건 개선 → 선도기업 중심 직무설명회, 현직자 토크 콘서트 → 일자리 매칭

5. 대구지방고용노동청

1. 산업재해 · 임금체불 · 청년고용 목표 및 시행방안

□ 산업재해 감축

❖ 초소규모 건설·별목현장 사고 사망자 **전년 대비 50% 이상 감축**

- ☞ ▲ (건설) 대구·경북 지역은 축사가 많은 농가 지역과 노후된 공단이 밀집되어 있어 **지붕 수리 및 개보수, 태양광 패널 설치 작업이 계속 증가할 전망**
- ▲ (별목) 대구·경북 지역은 **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전국 피해의 절반 가량 차지(49.6%, 205만1천그루)** 하고, **울진(22년), 안동(25년) 지역 대규모 산불로 인한 재해복구로 별목작업이 많아질 전망**
- (분위기 조성) 노·사단체, 산림청, 지자체, 재해예방기관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, 릴레이간담회 및 합동캠페인 정례화(분기별)
 - * ▲ (MOU) 산림청-경상북도 업무협약(2월), ▲ (업무협약) 정보공유를 위한 지자체장 면담 추진 (경산시 完), ▲ (간담회) 유관기관 간담회 분기별 추진(산림조합 및 기술지도기관 등 4회 完)
- (현장밀착)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으로 지자체 인허가 현장 등을 파악하여 태양광·지붕공사·별목현장 집중관리* (패트롤, 현장안전교육)
 - * ①지붕공사 취약시기(봄·가을), ②별목작업 취약시기(1월~5월/가을) 등
- 지자체 인허가 시 산업안전 관련 자료(OPS 등) 제공 및 사전 교육 실시, 언론 홍보(필요시 현장 취재) 및 보도자료 배포로 경각심 고취
- (점검·감독) [노동청]패트롤·[공단]지킴이·[공단]위탁사업 등과 연계하여 소규모 현장 공유·집중점검(33,000개소* 이상) 및 재해다발 지역 노동청-지방정부 합동점검(40개소 이상) → 행정사각지대 해소
 - * ▲ 패트롤(감독관 42명) 4천개소, ▲지킴이(공단 97명, 지자체 20명) 25천개소, ▲위탁사업(3개기관) 4천개소

□ 임금체불 근절

❖ (체불 감소) 「초석의 해」'26년 10% ↓ → 「완성의 해」'30년 50% ↓

- (사업장 집중관리) 임금체불 전수조사(상시) 및 취약사업장 관리(분기별) → 다수·고액 체불사업장을 감독부서와 연계하여 관리 강화

- (협업) 체불액 감소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관계를 구축하여,
 - 건설현장 지도·점검 시 「상습체불근절법」 및 직상수급 연대책임을 설명·안내 → 건설현장 체불 사전 예방 노력 집중
 - 대구·경북 지역 사업주단체 38개소에 사업주 용자제도,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등 안내 → 체불예방 및 사업주 청산 지원
- * '25. 10월말 기준 35억 원의 체불 사업주 용자[전년 동기(26억 원) 대비 33.6% 증가]

❖ (강제수사 강화) '25년 체포영장 31건 → '26년 체포영장 37건(20% ↑)

- (강제수사 강화) 신규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교육 시 강제수사(체포·구속·압수수색 등)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,
 - 집행 인력이 부족 시 강제수사 경험이 많은 수석수사팀에서 인력을 지원
- * '25년 신규감독관 멘토링 시 강제수사 교육을 실시하고, 체포영장 집행 실습 실시

□ 청년고용 촉진

❖ (취업자수 증가) 3년('22년~'25년) 평균 대비 **10% 이상 증가**

* 취업자수: 6,224명→7,000명 이상(본인취업 포함: 45,517명→50,000명 이상)

- (배경) 대구(경산)는 전국 최대 대학 밀집 지역이나, 고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(17개 시·도 중 13위), 경북은 포항·구미 중심 전통적 철강·전자산업 강세지역이나 최근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정 등 고용 위기 우려
- (체계) ^(공통)고용센터 중심 고용 네트워크 협업 강화, ^(대구)대구·경산센터·대구서부를 청년특화센터 지정·운영, ^(경북)기업 진단 컨설팅 등을 통한 기업의 고용 여건 개선
- (전략) ①준비중, ②장기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'①발굴→②맞춤형 취업지원→③기업채용지원→④훈련·일경험→⑤취업·유지' 5단계 지원체계 구축

- ① **발굴**: ①DB기반(대학·청년센터), ②부모·가족 연계, ③찾아가는 소통형 홍보
- ② **맞춤형 취업지원**: 집단-개인상담 통합형 모델, 대학-기업 직행 모델 구축 등
- ③ **기업채용지원**: 기업진단·컨설팅→지원사업연계→고용여건 개선→채용지원
- ④ **훈련·일경험**: 양질의 일경험 기업 발굴('25항공·금융→'26IT·미래모빌리티 분야로 확대), 시직무역량 분석을 통한 적합 직업훈련 연계
- ⑤ **취업·유지**: 일자리 공동 발굴, 청년일자리데이,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

2. 청장 역점 추진사항

- (추진과제) 현장 노사가 함께하는 “지역 밀착형 예방 공동체”와 지역 산재예방을 위해 지방정부 및 민간기관과 “두터운 외각” 구축
 - (추진방안) ①노사가 함께하는 참여형 안전분위기 확산, ②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 밀착형 거버넌스 고도화, ③청·지청 지역 상황을 감안한 특화사업 추진
- * ① 노사 공동 참여형 「대구경북 자체 안전 실천 운동」 포럼 및 공모 → 우수사업장 청장 포상 등
② 노동청-지방정부-공단-재해예방기관 정보공유, 결의대회 및 합동 패트롤 실시
③ 지역별 위험상황 분석(철강, 벌목, 대규모 건설현장 등)하여 선제적 기술지도 및 패트롤 강화

3. 국민 체감도 제고방안

□ 「(가칭)대구·경북 안전탑 지키미 네트워크」를 통한 촘촘한 안전망 체감
↳ ‘우리 노동부’로의 대전환을 위한 지역 맞춤형 거버넌스로 “노동청-지방정부-민간기관”이 원팀 (One-Team)이 되어, 정보 사각지대 해소 및 일터 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협업 체계

- 맞춤형 안전수칙 및 지원사업 정보 선제적 안내와 언론 홍보를 통해 “안전동행(安全同行)을 위한 동반자” 인식 제고
- 지방정부·산림조합 등 협·단체 간담회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 산재 예방을 위한 밀착형 안전 문화 조성 기여

□ 다양한 채널을 통한 임금체불 예방 홍보 강화

- (노동자)네이버카페·블라인드 앱 등의 커뮤니티*, (사업주)사용자 협·단체를 통해 감독 사례 전파, 체불임금 청산지원제도 등을 주기적으로 홍보
- * 인스타, 블라인드 앱, 네이버 카페(재무쟁이, 인사담당자 모임) 등 직장인 대상 커뮤니티
- 임금체불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 방침(사업장전수조사, 강제수사 등)이 사업주들에게 효과적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보도자료 수시 배포

□ 청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전략 추진

- 청년이 선호하는 온라인 매체를 활용, 유튜브 쇼츠, 로고송 제작, 인스타그램, 생성형 AI를 활용한 포스터 제작·배포 등 홍보 다각화
- 청년일자리 수요데이, 기업설명회, 취업동아리 지원 등 현장중심 서비스 제공 및 청년에 영향력이 큰 부모·가족 설명회 적극 개최

| 노동시장 격차 해소 |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 |
|--|-------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청년 일할 기회 격차 해소 ◆ 소상공인 길목잡기 및 예방지원 | - |

□ 청년특화센터 운영 및 특화 서비스 제공으로 청년고용률 촉진

- (내용)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청년취업지원 모델 발굴
 - 대구·경산센터·대구서부를 청년특화센터 연계, 취업지원 모델 발굴
 - AI 활용 개인별 맞춤형 취업컨설팅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제공
 - 청년층 선호 일경험 기업 및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매칭 강화
 - 이를 통해 대구·경산 자동차부품제조업 등과 대구·경산지역 대학(23개 대학 소재) 졸업생 및 준비중 청년 적극적 취업 지원
- (시기) 청년취업지원 네트워크 고도화 및 운영위 등 구축(1월 중), 준비중 청년 DB 구축 및 협력방안 등 논의 후 2월부터 본격 시행
- (추진전략) 청년고용 협업체계 고도화 및 청년특화 서비스 제공
 - ①청년센터 등 고용네트워크 고도화, ②지역 자동차부품 중견·강소기업 발굴, ③항공·금융·IT기업 등 지역내 미래전략업종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 등 청년취업지원 모델 개발

□ 지붕공사 및 별목현장 등 초소규모 사각지대 선제적 관리망 가동

- (내용)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행정 사각지대 해소
 - (지방정부) 인허가 정보를 활용하여 사고가 빈발하는 지붕공사 및 별목 현장 정보를 실시간 포착 → 적시 지도·점검 실시
 - (그 외 유관기관) 재해예방기관 및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과 MOU·간담회·안전교육 등 협업 강화 → 안전의식 분위기 조성
- (추진전략)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로 촘촘한 안전망 구축
 - (길목 확보) 지방정부(건축과·산림과 등)와 협업을 위한 「(가칭)대구·경북 안전탑 지키미 네트워크」 구축 → 현장발굴 및 교육·홍보·점검

| 구분 | 주요내용 | 관련부서 |
|-----------|--|--|
| 초소규모 건설현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자체 릴레이 면담(기관장 또는 부서장) • '지붕공사 취약시기(봄)' 집중관리기간 운영(지율 점검표 배부 및 집중점검 / 노동청·공단 실무간담회 1.7.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건축신고) 건축과 등 • (태양광) 에너지산업과 등 |
| 별목현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림청-지자체 MOU 및 릴레이 간담회 • 권역별 종사자 교육(대구권·경북동부·경북북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별목허가) 산림과 등 |

6. 광주지방고용노동청

1. 산업재해·임금체불·청년고용 목표 및 시행방안

□ 산업재해 감축

❖ 떨어짐·맞음 중대재해 30%* Down, Safety Up: 85명→71명

○ (달성 방안)

- (관리 사각지대+소규모) 유관기관, 업종별 협회 및 단체와 연계하여 안전관리 영세 사업장 발굴·밀착 관리

| 1단계: 발굴(길목 찾기) | 2단계: 위험분류 | 3단계: 현장조치 |
|--|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[지방정부 공공발주공사, 맨홀작업] ▶ [한우·양돈협회] 지붕·축사 ▶ [산림청] 벌목·전지작업 ▶ [전기안전공사] 태양광 설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건설(신축, 증축) 분류, 작업 시기 파악, 계절별 시기별 홀드포인트 ▶ 떨어짐 등 위험 요인 확인 및 안전조치 안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상시 패트롤 점검 ▶ 현장지도에 중점 (즉시 시정조치) → 미이행시 감독 전환 (행·사법 조치 연계) |

* [업종별 협·단체] ▲ (벌목) 관내산림조합, 원목생산업협회, ▲ (질식) 상하수도협회, 양돈협회, ▲ (한파) 생활폐기물 협회, 주택관리사협회 등

- (고위험+소규모) '전담-자율-확인' 3중 체계로 위험 상시 관리
- (자율 안전문화 확산)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안전 점검을 꾸준히 실천하는 자율 안전 문화 확립
 - * ▲ (안전관리자) 당일 고위험 작업군 선정·공지, 기계/기구 등 체크리스트 제공
 - * ▲ (노동자) 안전모·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, 주변 환경 스캔·위험요소 확인
 - * ▲ (정부) ▲ 근로자 핵심 안전 수칙 자체 제작 배포(포켓용 OPS, 18개 외국어 번역본 포함)
 - ▲ 안전보건표기 스티커북 배포(1,000부) ▲ 안전일터 만들기 3·5·3 캠페인
- (합동점검) 중대재해 다발 업종 대상 유관기관 합동 점검 실시
 - * ▲ '안일프' 사업장(고위험): '26년 대상 선정 및 불시 점검(10,000개), '25년 2차 모니터링(72개)
 - * ▲ (산재과·건설과) 패트롤팀: 고위험+소규모 사업장 위주 상시 순찰(3천여개)
 - ↳ 건설분야: 공사 종료 시까지 원청에서 책임지고 하청 노동자 관리 감독
 - * ▲ (소규모 점검) 지방정부·공단 '안전지킴이' 패트롤 불량 신고 사업장(20,000개)
 - * ▲ (민간재해 예방기관 협력) 컨설팅 미이행 사업장 파악 및 점검

□ 임금체불 근절

❖ (임금체불액) 전년 대비 15% 감축 ⇒ '30년까지 50% 감축

- (취약사업장 집중 관리) 분기별 고액 체불 사업장 집중 관리(20여개소)
 - ▲ 기관장 현장 방문 등 지도를 통해 청산 유도, ▲ 사업주 용자·대지급금 등 제도 안내·지원 강화
 - 관내 체불액이 다수 분포하는 제조업, 건설업 및 요양기관 업종 집중 관리
- (전수조사 통해 체불 사전예방) 팀별 감독반(2~3명)을 편성, 전수조사 대상 사업장 현장감독을 실시하여 숨어있는 체불임금 청산
 - 상습·고의 대규모 체불 사업장은 협업하여 확대감독을 실시하고, 지방정부와 임금체불 현황을 공유하는 등 지역 관심 유도
- (엄정수사 분위기 확산) 상습·고의체불 사업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실질적 억제 효과 확보
 - 강제수사 지원반(10명)을 운영하여 신속하게 구속·체포 영장 집행 → 집행 후 언론 홍보 및 청 내 사업장 공문 발송을 통한 경각심 제고

□ 청년고용 촉진

❖ 청년 취업자 수 전년(44천명) 대비 10% 증가

* 고용24를 통한 청년(34세 이하) 취업자 수: '24년 42,890명, '25년 44,434명

○ (달성 방안)

- (DB구축) 취업 준비 중 청년 12만명* 지원

* 대학 및 청년성장·청년도전 등 '준비 중' 청년(1만명), 고용센터 서비스 참여자(11만명)

- (지원방안) 청년 구직자와 청년 선호 기업 매칭 중점 추진

| 청년 구직자 관리 | 청년 선호기업 확산 | 청년 취업자수 증가 |
|--|---------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[구직플 구성] 취업 준비 중 청년 12만명 대상 ▶ [단계별 서비스] 회복 →진로탐색→역량강화 →취업알선 | +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[매칭] 청년+청년 선호기업 (수요데이 및 채용행사) ▶ [지원] 지원금을 활용한 신규 및 근속 채용 지원 |

2. 청장 역점 추진사항

- **(떨어짐 근절)** 전년도 떨어짐·맞음 전체 중대재해의 53% 차지, 소규모 건설 현장, 지붕·축사 현장 등 집중 점검* → 2분기 이후 감독 강화
 - * 청장 주 2회 현장 점검(안일프+패트롤, 104개소), 각 지역 지청장과 합동점검(격월, 6개소)
 - 지방정부 및 안전공단 ‘안전지킴이’ 연계하여 떨어짐 다발 지역, 소규모 현장 집중 패트롤 추진
 - ‘지중해’ 사업 활용하여 기술지원 및 점검 등 집중지원(지방정부 협업)
(대상) ▲50억 미만 건설 현장, ▲축사·태양광 고위험 사업장(안일터 지속 추진)
(지도) ▲안전 일.일.일: 일단 멈추고, 일분만 점검하고, 일터의 안전을 지키고
▲안전모 집중 계도, ▲근로자 핵심 안전 수칙 배포(OPS, 18개 외국어본 포함)

3. 국민 체감도 제고방안

- **(함께 만드는 안전한 현장)** 학교 급식 협의체 운영*,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·건설 패트롤 상시 점검 및 안전 동행 리포트**
 - * 학교 급식 종사자 보호 → 교육청(학비노조 및 학교 관계자)+노동청이 참여 안전·보건 환경 및 제도 개선
 - ** 언론기관(방송국, 신문사 등) 점검 참여로 정부안전 정책 홍보·확산에 활용
- **(‘안전 연대’ 지속 확산)** 제조업·건축·토목업 자율안전협의체, 건설 현장 ‘릴레이 캠페인’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대상 컨설팅·안전 지도
 - 노·사·민·정 참여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통해 안전 일·일·일 홍보·확산, 산단 조식 지원 사업 연계 안전 캠페인, 지역맞춤사업으로 공동 이용시설 개선
 - * (외국인 참여) 18개 외국어본 OPS 배포(광주·전남 외국인권익센터 등 관련기관)
- **(임금 체불 경각심 고취)** 업종별 맞춤형 교육, 주요 체불 취약 업종 인식 개선 간담회, 구속 수사 사례 보도자료 배포 등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
- **(청년 선호 기업 확산)** ‘고용-노동-산안-유관기관 ONE팀’ 협업으로 기본(임금, 노동시간, 안전)과 상식(화장실, 구내식당 등 근무환경)이 보장 되는 기업 지원 중점 추진
- **(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)**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, 대체인력지원금, 워라벨+4.5 프로젝트 등을 활용하여 청년 선호 기업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의 안정적 취업 지원 → 지역 청년 취업률 증가

| 노동시장 격차 해소 |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노동 현장 위험 격차 해소 ◆ 포괄임금제 금지 등 공짜 노동 근절 ◆ 개정 노조법 안착 ◆ 청년이 찾아오는 고용센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가짜 3.3 감독 ◆ 실 노동시간 단축 ◆ 새로운 산재 위험 요인 대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택배, 플랫폼 등 특수형태근로자 종사자 보호 - 기후 위험 요인 선제 대응 - 산업전환 위험 요인 예방 |

□ **노동 현장 위험 격차 해소 (“광주 현장 틈새-제로(Zero) 프로젝트 추진”)**

- **(내용)**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 발굴, 대상 사업장 밀착 관리로 떨어짐·맞음 중대재해 30% 감축 추진
- **(추진전략)**
 - **(소규모 사업장 집중관리)** ① 지방정부, 업종별 협·단체와 **협업***하여 영세 사업장 발굴(1월) → OPS 배포, 안전지킴이 패트롤 점검 ② 고위험 소규모 사업장 → ‘전담-자율-확인’ 3중 체계로 위험관리(상시)
 - * 담당자 지정, 핫라인 및 소통방 개설
 - **(자율 안전문화 확산)** 자율협의체를 통해 안전역량을 소규모 사업장에 전파, 민관합동 점검 시 언론 동행 취재·안전문화실천추진단 안전캠페인 실시(매월)
 - * (노사 참여) OPS(18개 외국어본 OPS) 자체 제작·배포, 3·5·3 활동으로 안전한 일터 만들기(협·단체 활용, 점검 시 배포)
 - **(패트롤-불량 사업장 연계 감독)** 공단, 지방정부 ‘안전지킴이’ 활용하여 사업장 점검, 시정조치 미흡 시 **합동 감독** 추진

□ **포괄임금제 금지 등 공짜 노동 근절**

- **(내용)** 국회·언론 등 문제 제기,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·제보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기획감독 실시 등 **공짜노동 관행 근절**
- **(시기)** 대상 사업장 선정(노동기준조사과와 협업, 1월중) → 업종별 협·단체 대상 사전 설명회(2월초) → 전체 물량의 25% 감독 실시(약 5개소, 3월중)
- **(추진전략)** · 익명신고센터 활성화 및 신고 사건과 연계한 포괄임금 오·남용 의심 사업장 발굴, · 감독 시 설문조사·노동자 면담 등을 통한 실태 파악, · 감독 결과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노동자 권익 침해 근절

□ **개정 노조법 안착**

- **(내용)** 초기 현장 혼란 최소화, 노사관계 안정화를 중점, 자율적·합리적 노사 교섭 질서 형성하여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으로 연계토록 **총력 지원**
- **(시기)** 상생교섭 모델 발굴(상시) → 설명회(1~2월) → 교섭 시 방문지도(3.10~)
- **(추진전략)** · 노사단체·중점관리 사업장 대상 설명회, · 실제 하청노조 교섭 요구 시 밀착 집중 교섭 지도 · 상생교섭 모델 1개소 이상 발굴

□ 청년이 찾아오는 고용센터

○ (내용) 청년의 고용센터 이용률 제고

* 미취업 및 '준비 중'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 청년 고용 네트워크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고용센터 프로그램 연계 및 취업지원

○ (시기) 고용 유관기관 청년 지원 추진 간담회(1월말~2월초) → 청년 정책 통합 홍보 실시(기관별, 2월초) → 청년 프로그램 운영(2월~)

○ (추진전략) ①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알림특과 병행하여 ②관내 직업훈련 수료(예정) 청년, ③실업급여 수급 청년 대상 집중 고용서비스 제공

□ 가짜 3.3 감독

○ (내용) 다양한 고용형태를 악용, 노동법 적용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'가짜 3.3계약'에 대응하여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 해소

○ (시기) 지역별 타겟 업종 선정(본부에 국세청 자료 先요구, 2월중) → 업종별 협회·단체 대상 설명회(2월) → 분기별 릴레이 감독 추진(3월~)

○ (추진전략) △국세청 과세정보 활용한 주기적 감독, △업종별·협회 등 단체와 간담회, 감독 결과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노동자 권익 보장

□ 실 노동시간 단축

○ (내용)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고 야간노동자 건강권 보호

○ (시기) 이슈 모니터링(전담자 지정, 상시)/특별연장근로인가 반복 신청 및 산재 발생 다수 사업장 명단 확보(노동기준조사과, 산재예방감독과, 1월) → 대상 사업장 선정(2월) → 전체 물량의 25% 감독 실시(약 5개소, 3월)

* 언론에 보도되는 등 감독 필요성이 상당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 착수

○ (추진전략) △특별연장 근로인가 반복 신청 및 산업재해 다수 발생 사업장 집중 감독(필요시 산재과와 합동 감독), △근로자 실태조사 활용 현장 중심 감독, △감독 이후 일터혁신 컨설팅 연계 및 보도자료 배포

□ 새로운 산재 위험 요인 대응 ("중대재해 ZERO")

○ (추진전략)

- (택배, 플랫폼 종사자 등) 과속·과로 운전, 배송물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등 사고 예방을 위해 택배·플랫폼 종사자 보호 이행 점검
* 배달라이더 대상 유상운송보험 가입, 교통안전 교육 이수 등(하절기 택배종사자 대상 계도)

- (기후 위험요인) 폭염·한파 취약 사업장 대상 지도·점검 강화
* 폭염한파 대응 가이드라인 및 OPS 취약 사업장 배포, 온열 질환 장애 호소시 직업병안심센터 연계

- (산업전환 대응) 관내 산업전환 필요 사업장(광양제철소 등)에 대해 노후시설 철거, 교체작업 시 사전 산업재해 예방 계획·수립

7. 대전지방고용노동청

1. 산업재해·임금체불·청년고용 목표 및 시행방안

1) 빈틈없는 산업재해 예방 : “떨어짐” 사고 예방 + 지역별 특화

❖ “떨어짐” 사고 사망자 15% 감축

- (“떨어짐” 예방) 대전청 + 지방정부 + 공단 + 민간단체 협업
 - (“길목”을 통한 지원 강화) 안전공단,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(80개), 안전일터지킴이(109명+ α) 등을 통한 기술지도 및 홍보
 - * 1억 미만 기술 지도 16,500회 실시(위탁) + 지킴이(2.6만회) 활동으로 보완
 - ※ “작업발판·안전난간 설치, 개구부 덮개 설치, 안전모·안전대 착용 등 중점 홍보
 - (현장 패트롤 연계) 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 결과 및 지킴이 활동 모니터링 → 상시 패트롤 점검 실시(4천여개소)
 - * 대전국토관리청/대전시·충남과의 합동 패트롤 점검도 단계적 확대(50개 이상)

※ 특히, 태양광·축사공사 관련 별도의 “지붕공사협의체” 구성('25.11월)
→ 핵심안전수칙 배포(4,000개소), 현황 파악 및 매주(金) 패트롤 점검

- (지역별 중점관리) 대전·충청지역 내 지역별 집중관리 업종 선정
 - (대전청) 산재발생 밀집지역·산단을 레드존으로 지정, 상·하반기(3~5월, 9~11월) 중대재해 다발 시기 집중 점검* 및 캠페인 실시
 - * 수시 패트롤, 드론 등 활용 + 지방청/공단/지정기관/지방정부 등 총동원

| | |
|----|---|
| 천안 | ▶ 철강업, 반도체, 자동차부품제조업 집중 관리(안전관리협의체 사례공유) |
| 청주 | ▶ 중상해재해(90일 이상 요양) 발생 상위 제조·기타업 집중관리 ▶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 담당자 지정, 상시 패트롤 전개 |
| 충주 | ▶ 시멘트 및 골재 채취업 집중 관리(5년간 96건 재해), 골재 채취업 동시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노사정 간담회 통해 우수사례 공유 |
| 보령 | ▶ 축산업 농가 집중 관리(전국 최대 밀집, 9.3%), 특히 지붕개조사업(지방정부),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(한국에너지공단) 협업·관리 |
| 서산 | ▶ 석유화학업종 및 폐쇄발전소 위험요인 예방 밀착 관리 |

2) 일한만큼 공정한 대우를 받는 일터 조성

❖ 임금체불 10% 이상 감축

- (전담 관리 체계) “팀 단위” 지역 전담 관리 체계 구축, 고액·집단 체불, 대량고용변동신고 등 취약 및 현안사업장 관리 강화
 - 특히, 3천만원 이상 고액체불사업장(약 12%) 대상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방문·점검회의 등을 통해 신속한 청산 등 지원
 - 체불 원인에 따라 <고의성無> 용자제도 활용하여 조기 청산 유도, (상습 체불 사업주) 신고형 감독으로 전환하고 강제수사 적극 추진
- (체불 전수조사) 최근 1년간 2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, ‘숨어있는 체불’ 적발에 주력
- (지역 협업) 업종/지역별 협의체(대전산업단지, 대덕테크노밸리, 외식업 중앙회 등) 협업, 감독 전·후 설명회 등을 통해 반복·유사 체불 예방
 - 노사민정협의회(대전·세종·충남), 대전시·충남 노동권익센터 및 지방 정부와 함께 기초노동질서 합동 캠페인(임금체불 등) 실시
 - 카카오톡 채널(「탄탄대로」)을 통해 사업주 등을 대상, 감독 시 주요 법 위반 사례, 노동관계법 Q&A 등을 전파 → 자율 개선 유도

3) “청년이 우리 지역에 정착”하도록 “졸업 전 접근” 강화

❖ 고용센터로 접근하는 미취업 청년 7만명 이상 지원

* 국민취업지원 2.2만명, 청년일자리도약 1.2만명, 직업훈련 5천명 등

- (「청년고용 TF」 운영) 고용센터 내·외부에 분절되어 있는 청년사업 총괄·조정 기능 강화 → 상반기 대전고용센터 시범실시 후 확산
 - * 現 “청년고용네트워크” 재구성, 3개 분과 신설하여 실질적 활동 지원
 - 청년·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월 4차례 현장 의견 수렴 실시(① 청년, ② 기업 인사담당자, ③ 대플센터, ④ 청년지원센터)
 - 청년 사업 간 연계,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기존 서비스 체감도 향상

- 예) ① 대학별 취업설명회 편차 → 대학 간 취업설명회 정보 공유 활성화
 ② 지역 내 일경험 기업 정보 공유 (대학~고용센터~대한상의 연계)
 ③ 비교가 두려운 청년 대상 “가칭청년 자신감 프로그램” 개발·운영

- (‘준비 중’ 청년 DB 활용) 일자리첫걸음 플랫폼을 통해 유입된 청년 대상 AI 기반 진로상담 후 각종 고용서비스 제공
 - * 국취, 구도패, 직업훈련 → 복합연계(복지, 금융)
- (시별우수기업-청년 연계) 경제단체·대전시·대전중기청과 협업, 성장업종(예: 방산·바이오 등) 및 기업선정, 관련 직무·근로조건 등 정보 수집
 - 대플센터와 연계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 기업 홍보, 기업 수요조사 후 1~2년차 신규입사자-대학생과의 만남 활성화
 - * 예) “대전에는 공공기관, 연구소만 있는게 아니라 좋은 기업도 많습니다”

| | |
|----|---|
| 천안 | ▶청년 with(네트워크) → 매칭데이 운영 ▶대학 10개교 MOU → 청년 참여형 일자리토론회, 잡페스티벌 등 |
| 청주 | ▶충북지역 청년고용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▶1분기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DB 구축 →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|
| 충주 | ▶유관기관 협업 네트워크 → 청년중심(HUB) 프로그램 운영 강화 |
| 보령 | ▶청년 일자리 이음 프로젝트(기업-청년구직자 참여 잡콘서트) |
| 서산 | ▶미래돋움프로젝트(자동차부품 기업-직업계고 졸업자) 충남전역 확대 |

2. 청장 역점 추진 사항

- ① 소규모기업, 말단 현장까지 “산업안전·체불근절 메시지”를 전달
 - * '25년 관내 사업장 규모별 체불액: ◦ 30인미만(1,399억), ◦ 30인이상(398억)
- ②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지역 메신저 역할 강화
 - * 고용센터-대플센터-지방정부-경제단체-청년 간 연결고리 역할에 중점
- ③ 노조법 2·3조의 지역 안착을 위한 현장 지원 강화
 - * 중점관리사업장(5개 원청) 지원, 상생교섭 우수모델 발굴 확산에 중점

3. 국민 체감도 제고 방안

- (노사 참여) 명예감독관 및 안전관리자,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(또는 근로자 대표) 등의 의견이 사업장 감독에 실제 반영토록 운영
→ 노사 참여에 기반한 노동 및 산업안전 감독 실시, 효능감 제고
- (대국민 접근성 향상) 직원 수요조사를 통해 민원인이 자주 묻는 서비스 대상 “고드래곤을 활용한 신청서 작성 방법” 동영상 제작·활용
* ① 육아휴직지원서 작성, ② 온라인 특강 신청방법, ③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등
- 지역 내 훈련기관 및 청년 취업카페 QR을 담은 지도 작성 등 보다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홍보도 진행
→ 수요자 중심의 홍보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완

붙임

1/4분기 성과 도출 과제

❖ 1분기에는 기존의 협업 체계를 재정비하면서, 정책집행에 만전

- (산업안전) 주요 업종별 “길목”을 포함한 협업체계 재정비, 지역 특성(규모·업종별)과 중대재해 DB 등을 활용한 중대재해 15% 감축
- (임금체불) 경제단체·업종별 단체와 협업하여 사전 설명회 및 현장 홍보 강화, 사업장 전담관리 체계 보완(10% 이상 임금체불 감축)
- (청년고용) 「청년TF」 중심으로 현장의견 수렴하여 기존 청년 사업 간 연계 강화,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 체감도 향상
- (고용위기 대응) 서산(석유화학), 보령(석탄화력)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일자리 사업(버팀이음프로젝트, 충남지역혁신프로젝트 등) 추진
* 이·전직근로자 Re-Start, 재직근로자 안심 패키지, 친환경발전기술 향상교육 등